



여성정책동향

- 여성정책동향(2009년 1/4분기)
최 윤 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동향분석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년 주요연구실적과
향후 추진과제
황 정 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기획팀장)
- KWDI 연구사업동향
편 집 부

여성정책동향 (2009년 1/4분기)

최 윤 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동향분석팀

경기침체와 여성 일자리 창출 정책

경제위기의 물결이 여성정책 분야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올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의 상당부분은 청년실업, 고실업율을 극복하기 위한 일자리창출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여성분야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정부는 2009년 사업계획에 앞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12만 5,000개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 부처에서도 상당한 예산과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 예고하였다.

여 성 부	노 동 부	보 건 복 지 가 족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50곳 개소 • 4만1000여명 취업지원 및 7만6000명 상담·직업훈련 지원 •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20곳으로 확대 • 지역맞춤형 인력양성 및 유망직종 발굴 • 여성부, 여성경제위기대책추진단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1885억원 투입, 1만5000개의 사회적일자리 지원 및 400개 사회적 기업 육성 • 총5조 4484억원 투입 적극적 고용안정 대책 추진 • 청년 2만5000명 대상 청년인턴제 및 1만명 대상 뉴스타트 프로그램 실시 • 직업훈련과 현장연수를 연계한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 주부대상 경력단절여성 특화훈련 실시 • 저소득층 취업지원 패키지 사업 및 생계곤란 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 빈일자리 DB 구축,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개 사회서비스 사업을 통해 일자리 7만2000개 창출 • 휴·폐업 영세자 및 실직·임직·일용직, 저소득층 여성에 우선지원 • 무직가구여성에게 일자리 1만 3850개 우선지원 • 긴급지원제도 급여기간 6개월로 연장 및 요건 완화 •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 (대도시 8500만원, 중소도시 6500만원)

여성부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50곳을 지역별로 설치하여, 3만7천명 취업지원 및 10만명의 여성들에 대한 상담과 직업훈련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기존의 12곳이었던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를 20곳으로 확장하였으며, 그 외에도 지역대학과의 여성인력양성(2천명), 전업주부 직업훈련(3천여명)등을 계획하였다. 또한 여성

구직자를 위한 커리어 컨설팅을 실시하고, 위민넷(www.women-net.net) 등을 통해 ‘여성의 힘으로 경제 위기 극복 캠페인’ 등을 벌이는 등 여성의 일자리 창출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노동부는 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일자리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2009년 한 해 동안 1,800억 이상을 투자하여 1만5천여개의 사회적일자리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미 2월말 4천개의 사회적일자리가 창출된 상태이다. 특히 사회적일자리는 여성의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8년 노동부 사회적일자리의 76%가 여성이었고, 62.3%는 경력단절 여성인 것으로 나타나,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들의 재취업의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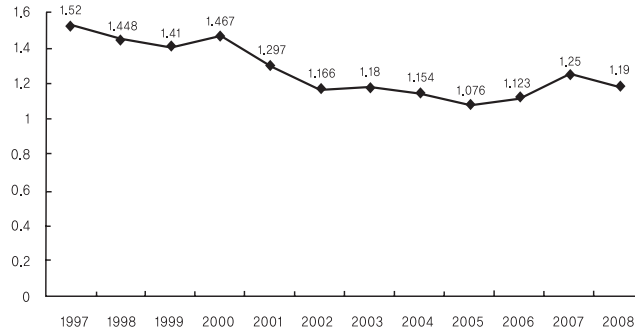
보건복지가족부 역시 사회서비스 분야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7개 분야 7만2천개의 사회서비스업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임시직·일용직 및 저소득층 여성들에게 우선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 중에서도 무직가구여성 1만3천여명에게 일자리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특별히 경제침체기에는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공급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 실제로 경제침체와 더불어 여성들의 일자리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경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8.8%로 지난 10개월만에 가장 낮았다. 이는 11월경의 참가율 50.4%보다 1.6% 낮은 것이며, 남성이 전달 대비 1.2% 하락한 것과 비교한다면, 여성고용상황이 좀 더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는 예년 동월(2007년 12월)의 49.3%와 비교해도 0.5% 하락한 수치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경기침체가 고용 불안정으로 이어지면서, 기존의 여성인력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던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일차적인 타격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우리나라 여성 가구주의 40%가 상대적인 빈곤상태에 있다는 OECD의 조사결과와도 무관하지 않다.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일자리창출에 만전을 기한다고 하지만, 좋은 일자리(decent job)의 창출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단발성 일자리보다는 실질적인 장기 취업의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시 하락하는 출산율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08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2007년 1.26명에 비해 0.07명 떨어져 3년 만에 감소세를 보였다. 출생아 수 또한 46만6천명으로 2007년(49만3천명) 대비 5.5% 감소하였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지난 2005년 1.07의 최저 합계출산율을 보인 후, 2006년부터 상승하였으나 2008년 다시 하락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 경우 내년에는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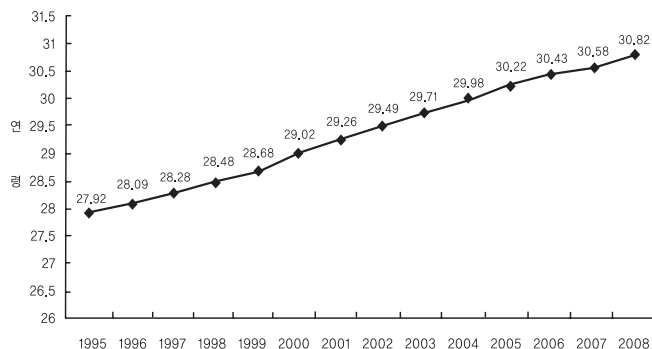
[그림 1] 연도별 합계 출산율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통계청에서는 2006년 쌍춘년해와 2007년 황금돼지해의 영향이 사라지지면서 다시 출산율이 감소하게 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고 있다. 2007년부터 30대 초반(30~34세) 모의 출산 비율이 20대 후반(25~29세) 여성의 출산율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번 통계청 발표에서도 20대 여성의 출산율은 2007년 대비 하락한 반면에, 30대 여성의 출산율은 상승하였다. 모의 평균 출산연령도 30.82세로 전년대비 0.23세 상승하였으며 이는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이다.

[그림 2] 연도별 모의 평균 출산 연령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저출산 경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성들의 양육에 대한 짐을 덜어주는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은 지난 2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 전후의 의료비와 아동 양육비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하는 ‘프랑스식 저출산 대책’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프랑스는 1993년 유럽 최저의 합계출산율(1.66명)을 보였으나,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으로 2007년 유럽 최고의 합계출산율(1.98명)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지원이 요구되는 프랑스식 저출산 대책을 우리나라에 적용했을 경우,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의 한 해 예산을 초과하는 비용이 요구될 것으로 예측되어 향후 어떤 식으로 적용할지가 주목된다.

여성의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나, 그에 못지않게 사회적 분위기와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다. 최근 한 취업포털 기관에서 실시한 육아휴직 사용에 관한 조사 결과, 우리나라 직장인의 43.0%는 '육아휴직사용이 어렵다'고 응답하였으며, 육아휴직이 가능한 직장인 중 78.6%도 '눈치보고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에 양육을 위한 사회적 배려가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 보여준다. 보육 시설의 미비와 무방비한 양육 정책 가운데에서 출산 지연 현상을 여성의 이기심으로 돌리기보다는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사회적 관심 및 인식의 전환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 인권에 대한 새로운 시각

이번에 여성의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에 기념이 될 만한 몇 가지 판결과 법 개정이 있었다. 법무부에서는 작년 말 논란이 되었던 친권법을 개정하기로 하였으며, 그동안 법 해석에 있어서 이견(異見)이 분분했던 부부강간죄, 트랜스젠더의 성폭행에 대한 새로운 법적 판결이 내려졌다. 모두 우리 사회 내에서 그동안 치열한 논쟁거리가 되었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 친권법 개정안 마련

2007년 한 여배우의 사망사건과 그의 자녀에 대한 친권 문제는 한때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다. 스스로 친권을 포기한 남편에게도 아내의 사망 후, 자동적으로 친권이 부여된다는 현재의 법체계에 대해 여성계를 중심으로 그 불합리성이 제기되었으며, 본원에서도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정책적으로 제안 하였다. 법무부는 지난 1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기존의 친권제도를 개선한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관련부처와 협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친권자가 사망 후, 1달 이내에 '친권자 지정 청구'를 해야 하고, 법원은 이에 대해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생존한 배우자나 혹은 제3의 후견인을 친권자로 지정하게 된다.

2) 부부강간죄 인정 및 성전환자 성폭행에 강간죄 최초 적용

아내를 흉기로 협박해 강간한 남편에게 우리나라 최초로 강간죄가 적용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 법원은 1970년 대법원의 판결 이후, 부부간에 강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2004년에 서울중앙

지법이 처를 성폭행한 남편에게 강제추행을 인정한 적은 있으나, 강간죄 적용은 이번 사례가 처음이다. 또한 지난 2월, 부산지법은 성전환자를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강간죄를 최초로 적용하였다. 지금까지 법원은 호적상 남성인 성전환자를 강간죄의 대상이 되는 ‘부녀’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강간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는 오랜 세월동안 ‘여성’으로 살아왔던 점, 성폭행범이 상대방을 ‘여성’으로 인식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강간죄를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이례적인 법 판결은 그동안 물성적인 법 해석으로 여성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대표적인 사안들이 공적인 영역에서 처음으로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3) 새롭게 발의되는 성폭력 관련 법안

성폭력과 관련하여 새로운 법안들도 발의되고 있다. 이은재 의원은 성폭력 피해진술 과정에서 전문가의 참여가 합법화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고 있고, 최영희 의원과 김욱이의원은 각각 군대 내의 성폭력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또한 최영희 의원은 성폭력법에 대한 친고죄를 폐지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다. 한편, 박선영 의원은 성전환자 성폭행범에게 강간죄를 적용한 것과 관련하여 성범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여전히 불안 여성 안전

이번 시즌의 핫 이슈 중에 하나는, 바로 ‘강호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7명의 여성을 납치·강간·살해한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여성들의 귀가시간을 단축시켰다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많은 시민들에게 치안의 불신을 느끼게 하였다. 실제로 스프레이나 경보기와 같은 호신용품의 주문이 쇄도하고, 이동통신업체의 위치추적가입자 수가 급증하였다고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은 지역별로 경찰서를 추가 설치하고, CCTV를 확충하는 등 경찰력을 최대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사회적 통제가 그다지 실효성이 없는 사이코패스의 경우에는 단순히 경찰력 강화만 가지고는 예방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역 전반적으로 범죄를 최대한 예방하는 자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역의 안전도를 평가하는 방안 등도 새롭게 논의되고 있다.

MB정부의 여성정책 1년, 반추의 목소리

지난 2월을 기준으로 이명박 정부가 집권 1주년을 맞이하게 되면서,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MB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의 자리가 마련되었다.

여성단체들은 여성부 폐지설과 더불어 여러 가지 우려곡절이 많은 현 정부의 여성정책을 진단하면서 혹평

을 내렸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전 정부가 마련해 놓은 제도적 틀을 실효성있게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여성부를 초미니 부처로 만들어 실질적인 정책집행마저 어렵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현 정부의 여성정책은 여성폭력지원과 일자리창출 뿐이며, 기존의 가족정책마저도 경제논리에 좌우되어 보수적인 관점으로 회귀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민주당도 MB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토론회를 열어, 여성부가 소극적인 자세로 본질적인 정체성을 상실하였다고 혹평하면서, 현 정부에서의 여성부는 마치 새마을 부녀회와 같은 인상을 준다고 비판하였다. 특별히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이 여론수렴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된 점, 성매매방지 지원사업을 수행하던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에 대한 계약이 객관적 평가 없이 해지된 점 등을 지적하였다. 또한 현재의 여성정책이 민관의 협력이 단절된 상태임을 우려하면서 새로운 관계 모색에 대한 필요성이 논의되기도 하였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년 주요연구실적과 향후 추진과제

황 정 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기획팀장

2008년 본원에서는 여성인력 수요 촉진 및 경제활동 지원 강화, 여성의 인권보호와 복지권 강화, 성평등제도와 인식의 격차 해소를 중점연구사업목표로, 19개의 연구과제(연구지원사업 제외)를 수행하였고 시의성있는 연구주제로 8개의 수시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또한 사회변화, 관련 부처의 정책연구수요 등에 부응하며 56개의 수탁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사 업 목 표

- 여성인력 수요촉진 및 경제활동 지원강화
- 여성의 인권보호와 복지권 강화
- 성평등 제도와 인식의 격차 해소

운 영 방 향

- 여성인력에 대한 수요를 확대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고용, 교육 훈련, 세제, 노동시장정책 등 다변적인 정책 지원 방안을 연구함
- 여성의 건강, 생활보장, 폭력 및 차별 해소, 자녀양육 지원 등 인권과 복지권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연구를 수행함
- 성평등 제도와 문화의 격차, 여성정책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연구를 수행함

이들 총 94개의 연구과제들은 여성 관련 주요 국정과제인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만들기’, ‘선진국 수준의 양성평등 실현’, ‘여성과 어린이가 걱정없이 다닐 수 있는 나라 만들기’ 등의 주요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연구사업들로 국가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기여하였다.

주요 내용 별로 보면,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만들기】와 관련해서는 ‘사회서비스분야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Ⅱ)’,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고령층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지원방안’, ‘새정부의 여성인력개발과 활용을 위한 비전과 정책과제’, ‘돌봄노동 종사자의 근로여건 실태조사 및 선진사례 연구’,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제고를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이 수행되었다.

【선진국 수준의 양성평등 실현】과 관련해서는 ‘신정부의 여성정책 비전과 전략 과제’, ‘성인지 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Ⅱ)’, ‘성주류화 관련 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Ⅰ)’, ‘성인지통계정보시스템 구축’, ‘성별영향평가분석법(가칭) 제정을 위한 연구’, ‘여성정책기본계획 이행상황점검 개선방안 연구’ 등이 수행되었다.

【여성과 어린이가 걱정없이 다닐 수 있는 나라 만들기】과 관련해서는 ‘아동성폭력 재범방지 및 아동보호대책’, ‘여성에게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방안’,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현황과 지원체계 개선방안’, ‘여성폭력 관련 서비스 개선방안: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등이 수행되었다. 이외에도 ‘일가족양립정책의 국제비교연구 및 한국의 정책과제’, ‘여성친화적 기업모델 구축’, ‘아동케어 실태 및 사각지대 해소방안’ 등과 같이 일가족양립지원체계 구축과 관련된 연구도 다수 수행하였다.

이러한 연구성과들은 대외적으로도 인정을 받아서 한경비즈니스에서 실시한 2008년 ‘한국을 움직이는 100대 싱크탱크’ 올해의 여성·노동 분야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본원이 그동안 여성·노동과 관련하여 수행해온 정책연구 성과를 인정받은 것으로 명실공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성정책 연구기관임을 보여주고 있다.

국정과제나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것 뿐 아니라 본원에서는 여성정책포럼, 연구과제에 기반하여 운영되는 다양한 국제 심포지엄 및 세미나를 통해 여성정책 현안을 공론화하고, 언론과의 활발한 인터뷰를 통해 여성정책을 알리는데 노력하고 있다. 여성정책포럼에서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2년의 성과와 과제’, ‘우리사회, 여아의 안전을 진단한다’ ‘친권법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가’ 등 현안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 여론 형성에 기여하였다. 또한 ‘세계의 성인지 예산 제도화: 성과와 과제’, ‘일과 가족의 양립: 일가족양립정책 국제학술심포지움’ 등을 통해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발전과 성과를 알리고 선진 사례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정책 개발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외에도 ‘다문화관점에서 본 이주와 젠더: 아시아 경험을 중심으로’,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여성인권보호’, ‘개발원조의 성주류화-현황과 과제’, ‘아태지역의 성인지통계 현황과 한국의 역할’ 등을 통해 글로벌 이슈에서 대한 한국의 역할을 조명하고 이를 공론화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2009년에는 성인지 예산 도입, 성별영향평가 확대 등 성주류화 제도의 정착과 확산이 예상되는 가운데, 제도적 발전 뿐 아니라 국민의 삶에 체감되는 여성정책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경제침체로 인해 여성경제활동 여건이 악화되고 있고, 폭력범죄로부터의 여성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2009년에는 전년도에 이룬 성과들을 토대로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역량 강화, 여성인권보호 및 성평등 수준의 제고, 성주류화 제도의 효과적 정착 및 세계적 위상 강화, 일가족 양립의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중점연구사업 목표 하에 35개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

2009년도 연구사업목표

-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역량강화
- 여성 인권 보호 및 성평등 수준의 제고
- 성 주류화 제도의 효과적 정착 및 세계적 위상 강화
- 일가족양립의 지원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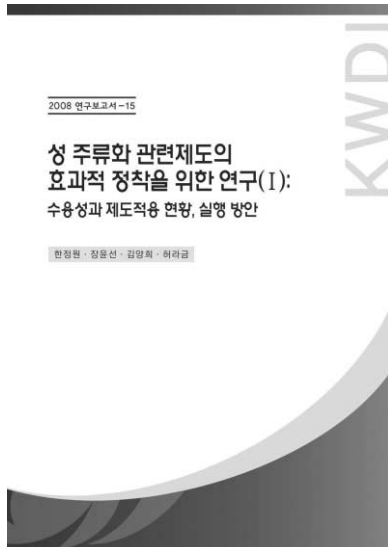
이외에도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정책의제를 발굴하는 노력을 경주하고자 ‘생활의 제 고객 패널 구축’, ‘생활 속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찾아가는 포럼’을 운영할 계획에 있다. 또한 여성정책에 대한 보다 폭넓은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전문가, 여성리더 등과의 정책네트워크를 강화할 예정에 있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들이 우리사회의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일·가족연구실, 2008년 연구성과 공개발표회(2009. 3. 20)

2008 Book 우수연구보고서 소개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I) : 수용성과 제도적응 현황, 실행 방안

- 영문제목 : Research on the Effective Establishment of Gender Mainstreaming System(I): Acceptance, System Application, and Action Plans
- 연구책임자 : 한정원
- 공동연구진 : 장윤선, 김양희, 허라금
- 페이지 : 275
- 발행일 : 2008. 12. 31
- 보고서번호 : 2008 연구보고서-15
- 구분 : 기본과제
- 가격 : 14,500원

■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한국의 실정에 맞는 성 주류화의 이론과 실행 전략을 마련하여 관련 제도의 효과적 적용의 토대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자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개년도에 걸쳐 추진하고 있다. 연구 1차 년도인 2008년에는 성 주류화에 대한 수용성과 제도 적용의 현실 또는 전망을 분석하고, 성 주류화의 법률 체계의 강화방안과 성 주류화 제도의 실행 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성 주류화 제도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실행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였다. 우선 성 주류화 이론과 실천에 관한 국제동향을 파악하고 폭 넓은 논의의 기회를 가지기 위하여 국내 최초로 성 주류화를 주제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또한 가장 먼저 성 주류화를 추진해 온 유럽의 성공과 실패경험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학습하기 위하여 네덜란드, 벨기에, 영국의 성 주류화 전문가를 심층 면접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성 주류화제도에 대한 공무원과 전문가들의 수용과 저항, 우려, 보다 나은 적용방안에 대한 의견 등을 수렴하였다. 더불어서 성 주류화의 전국적인 확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강원, 충청, 영남, 호남 등의 4개 지역에서 '지역정책의 성 주류화 플랫폼'을 개최하였는데 주 목적은 지역 정책의 성 주류화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지역정책의 성 주류화를 촉진하기 위한 관계 집단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2008 Book 우수연구보고서 소개



한국여성건강 현황 및 정책과제

- 영문제목 : Korean Women's Health Conditions and Policy Agenda
- 연구책임자 : 김영택
- 공동연구진 : 안상수, 정진주, 최승원
- 페이지 : 242
- 발행일 : 2008. 12. 31
- 보고서번호 : 2008 연구보고서-10
- 구분 : 기본과제
- 가격 : 12,500원

■ 연구목적

한국은 여성건강에 대한 포괄적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건강통계가 부재하여 기초적 실태 파악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성별건강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성별 건강형평성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여성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연구내용

본 연구는 기존의 문헌검토를 통하여 성(sex), 젠더(gender)와 건강(health)의 관련성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를 하여 성·젠더가 건강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외국(미국 및 캐나다) 여성건강 통계 현황과 여성의 10대 건강 항목별 문헌을 고찰하였다.

여성의 10대 건강항목을 선정하여 한국에서 젠더별 건강통계, 젠더와 여타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건강상태를 보여주는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 분석 결과로 여성건강 현황 및 정책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외국 사례를 고찰한 후 향후 현 정부의 여성건강정책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2008 Book 우수연구보고서 소개



성인지 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II):

성인지 예산서(안)의 시범작성 및 추진체계 구축방안을 중심으로

- 영문제목 : Study on Institutionalization of Gender Budgeting(II) : Focused on Gender Budgeting Statement and Implementation System
- 연구책임자 : 김영옥
- 공동연구진 : 조선주, 마경희, 유영진, 이선행
- 페이지 : 363
- 발행일 : 2008. 12. 31
- 보고서번호 : 2008 연구보고서-6
- 구분 : 기본과제
- 가격 : 21,500원

■ 연구목적

본 연구는 2007년도부터 총 3년간의 계획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성인지 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의 2차년도 연구이다.

2007년도에 수행된 1차년도 연구는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성인지 예산제도의 개념과 방법론 등 기초적인 영역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2차년도 연구는 정부 내에서 제도로써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도구와 절차에 비중을 두고, 『성인지 예산서』를 시범적으로 작성하였고, 성인지 예산서를 포함한 성인지 예산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를 개발하였다.

■ 연구내용

2007년도에 개발한 성인지 예산서 양식을 수정·보완하여 성인지 예산서를 시범적으로 작성하였고, 이와 연계하여 성인지 결산서 양식과 작성 지침을 개발하였다.

해외의 성인지 예산제도 추진체계를 검토하고, 정부기관의 담당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하여 여건을 점검한 후 기획재정부와 여성부, 전문가 집단 등 관계 기관의 협력 및 추진체계와 실행전략을 모색하였다.

성인지 예산과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연계를 위하여 성인지 예산사업의 성과 관리를 위한 성과지표 개발 지침을 마련하였다.

성인지 예산제도의 이해를 확산시키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국내외의 다양한 성인지적 예산분석 사례를 수집하여 소개하였다.

2008 Book 우수연구보고서 소개



근로장려세제(EITC)와 여성의 노동공급: 실증분석과 정책과제

- 영문제목 : Earned Income Tax Credit and Female Labor Supply: Empirical Analysis and Policy Agenda
- 연구책임자 : 조선주
- 공동연구진 : 김영옥, 정진욱, 임병인, 이선행
- 페이지 : 190
- 발행일 : 2008. 12. 31
- 보고서번호 : 2008 연구보고서-3
- 구분 : 기본과제
- 가격 : 13,000원

■ 연구목적

본 연구는 근로장려장려세제의 시행으로 인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즉, 노동공급의사 결정)와 근로시간(노동공급시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에 가구단위의 정책집행이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으며, 특히 근로장려세제로 인해 성별에 따라 노동공급의 의사결정을 달리 할 수 있다는 것을 분석하였다. 또한 여성 가구주 및 '2차 소득자로서의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에 더 중점을 두었다. 이에 근로장려세제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 및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에 따라 여성 경제활동을 촉진·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로써 개선 및 정착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 연구내용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크게 4가지이다. 첫째, 국내외 각국의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주요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국가별 EITC 사례를 분석하였다. 둘째,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의 현황과 여성이슈를 분석하였다. 셋째, 여성의 노동공급함수를 도출하였고, 실증분석을 위한 축약형 방정식을 제시하였다. 한국복지패널자료와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사용하여, 근로장려세제 시행이 여성에게 어떠한 경제적 효과를 줄 것인가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와 근로시간 측면으로 나누어서 실증분석하였다. 넷째, 실증분석을 통하여 근로장려세제가 여성경제활동촉진 및 근로복지를 위한 제도로써 정착, 발전하는데 필요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보고서 목록

1. 2008년도 연구보고서 목록

1) 기본, 협동과제

- 2008 연구보고서-1. 8대 총선 보도 성별분석과 여성후보의 미디어 활용방안
김원홍, 이수연, 고은경
- 2008 연구보고서-2.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2차 연도) - 다문화 역량 증진을 위한 정책·사회적 실천 현황과 발전방향- (총괄과제)
장미혜, 김혜영, 정승화, 김효정
- 2008 연구보고서-2-1.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패러다임과 국가별 유형비교 (세부과제1) <위탁과제>
최종렬, 김정규, 임운택, 최인영
- 2008 연구보고서-2-2. 다문화교육을 위한 범교과 교수·학습프로그램 개발연구
오은순, 김민정, 홍선주
- 2008 연구보고서-2-3. 생활세계의 다문화 교육프로그램 사례연구 및 적용방안 (세부과제3) <위탁과제>
김현미, 김영옥, 김민정
- 2008 연구보고서-2-4.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사회서비스 현황과 정책과제(세부과제4)
이선주, 양애경, 장미혜, 최현미, 송성실
- 2008 연구보고서-2-5.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문화정책 현황과 발전방향 (세부과제5)
김이선, 김인순, 이창호, 박준규
- 2008 연구보고서-3. 근로장려세제(EITC)와 여성의 노동공급 : 실증분석과 정책과제
조선주, 김영옥, 정진욱, 임병인, 이선행
- 2008 연구보고서-4. 고령층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지원 방안
박성정, 오은진, 김미경, 박성희
- 2008 연구보고서-5. 2008년 여성가족패널조사 사업보고서 및 제1차 기초분석보고서
박수미, 이택면, 김승연, 우원규, 강석훈
- 2008 연구보고서-6. 성 인지 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Ⅱ) : 성 인지 예산서(안)의 시범작성 및 추진체계 구축 방안을 중심으로
김영옥, 조선주, 마경희, 윤영진, 박노옥, 이선행
- 2008 연구보고서-6-1. 성인지 예산서 시범작성 및 성인지 결산서 양식 개발
김영옥, 조선주, 마경희, 윤용중, 이선행
- 2008 연구보고서-6-2. 성인지 예산제도의 추진체계와 실행 방안 <위탁과제>
윤영진, 이재인, 이재원, 김은정
- 2008 연구보고서-6-3. 성인지 예산의 성과지표 개발 지침
박노옥, 나원영
- 2008 연구보고서-6-4.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 제도화 방안 <위탁과제>
신두섭, 강기홍, 류영아, 박기묵
- 2008 연구보고서-6-5. 해외의 성인지 예산 : 정부주도 3개국 심층연구
마경희, 최 진, 배유경
- 2008 연구보고서-6-6. 공공지출이 성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김영옥, 마경희, 이은아
- 2008 연구보고서-6-6-1. 공공지출이 성불평등에 미치는 영향(1)-산재보험급여 지급의 성불평등 연구
정진주, 김형렬, 임준정, 최경희, 나성은
- 2008 연구보고서-6-6-2. 공공지출이 성불평등에 미치는 영향(2)-건강보험 급여의 성불평등에 관한 연구
최은숙, 전경숙, 조선주, 이춘지

- 2008 연구보고서-6-6-3. 공공지출이 성불평등에 미치는 영향(3)-장애인복지 공공지출의 성불평등에 관한 연구
석재은, 김가을, 김경희
- 2008 연구보고서-6-6-4. 공공지출이 성불평등에 미치는 영향(4)-성폭력 관련 공공지출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변혜정
- 2008 연구보고서-6-6-5. 공공지출이 성불평등에 미치는 영향(5)-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사업 공공지출의 성
인지적 분석
양민석, 이재경, 유정미
- 2008 연구보고서-7.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추진현황 및 발전방안
김경희, 백영주, 김돌순, 이진옥, 여명희
- 2008 연구보고서-8. 여대생의 직업세계 인식 실태조사
신선미, 정경아, 구정화
- 2008 연구보고서-9. 남성의 부성경험과 갈등에 관한 연구
김혜영, 황정미, 선보영, 김동기
- 2008 연구보고서-10. 한국여성건강 현황 및 정책과제
김영택, 안상수, 정진주, 최승원
- 2008 연구보고서-11. 여성폭력관련 서비스 개선 방안 : 가정폭력 ·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이미정, 변화순, 황정민, 이소영
- 2008 연구보고서-12. 일가족양립정책의 국제비교연구 및 한국의 정책과제
홍승아, 류연규, 김영미, 최숙희, 김현숙, 송다영
- 2008 연구보고서-12-1. 일가족양립정책의 국가별 심층사례연구
홍승아, 류연규, 김수정, 정희정, 이진숙
- 2008 연구보고서-12-2. 일가족양립지수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위탁과제>
송다영, 장수정, 김은지
- 2008 연구보고서-12-3. Balancing Work and Family
홍승아
- 2008 연구보고서-13. 돌봄노동의 분야별 제도화방안 연구(I) : 가족 내 아동돌봄도우미를 중심으로(총괄
과제)
장혜경, 김영란, 김필숙
- 2008 연구보고서-13-1. 가족내 아동 돌봄 도우미 이용실태 및 지원방안(세부과제1)
장혜경, 김영란, 서문희, 김용희
- 2008 연구보고서-13-2. 아동돌봄도우미 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안(세부과제2) <위탁과제>
원종학, 전병hil
- 2008 연구보고서-13-3. 아동돌봄도우미 인력현황 및 관리방안(세부과제3) <위탁과제>
강일규, 김기홍, 변숙영, 김덕기
- 2008 연구보고서-14. 여성인권보장 및 차별해소를 위한 관련법제정비연구(II) -가족의 다양화에 따른 관련
법제 정비
박선영, 윤덕경, 박복순, 김혜경
- 2008 연구보고서-15.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I) - 수용성과 제도 적용 현황, 실행방안
한정원, 장윤선, 김양희, 허라금
- 2008 연구보고서-15-1. 성 주류화의 기반 강화를 위한 법률체계 구축방안<위탁과제>
김선옥, 장명선, 한지영, 선민정
- 국제사회의 성주류화 동향과 한국의 여성정책 전략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08 연구보고서-16. 사회서비스분야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민현주, 김종숙, 김난주, 하갑례
- 2008 연구보고서-17. 다양성 관리(Diversity Management)차원에서의 여성인적자원 개발
임희정, 양인숙, 강민정
- 2008 연구보고서-21. 한국 공적개발원조(ODA)의 성 인지적 분석
김영혜, 정혜선, 박숙희, 김진영

2) 수시과제

- 2008 연구보고서(수시과제)-1. 중앙아시아 여성정책 협력사업을 위한 탐색연구
백영주, 이수연, 김영혜, 이선주, 김인순
- 2008 연구보고서(수시과제)-2. 신정부의 여성정책 비전과 전략과제
민무숙, 이수연, 박성정, 김혜영, 김은경
- 2008 연구보고서(수시과제)-3. 새정부의 여성인력개발과 활용을 위한 비전과 정책과제
김종숙, 박수미, 오은진, 조선주
- 2008 연구보고서(수시과제)-4.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 현황과 지원체계 개선방안
변화순, 이미정, 김혜영, 황정미, 이선형
- 2008 연구보고서(수시과제)-5. 여성에게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방안
장미혜, 윤덕경, 안상수, 김영택, 이승훈
- 2008 연구보고서(수시과제)-6.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오은진, 김종숙, 김난주, 이상돈, 김지현
- 2008 연구보고서(수시과제)-7. 주요국의 여성정책추진 체계 연구
김원홍, 백영주, 박복순

2. 2007년도 연구보고서 목록

- 2007 연구보고서-1. 고학력 여성의 해외취업 지원사업 실태와 정책과제
김남희
- 2007 연구보고서-2. 성 인지 예산분석기법 개발 및 제도적 인프라 구축방안 연구
김영옥
- 2007 연구보고서-2-1. 중기 재정운용계획 및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성인지적 분석
외부
- 2007 연구보고서-2-2. 성인지 예산 성과지표와 성과관리체계 개발
외부
- 2007 연구보고서-2-3. 해외의 성인지 예산: 다양성과 정책적 선택
김영옥
- 2007 연구보고서-3. 여성 연금수급권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유연규
- 2007 연구보고서-4.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지원방안 연구
홍승아
- 2007 연구보고서-5. 대졸여성 청년층 노동시장 구조파악 정책과제
김종숙
- 2007 연구보고서-6. 공식영역에서의 돌봄노동 실태조사
장혜경
- 2007 연구보고서-7. 사회서비스분야 여성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민현주
- 2007 연구보고서-7-1. 사회서비스분야 여성일자리창출을 위한 제도환경연구
외부
- 2007 연구보고서-8. 외국의 여성건강증진 기반고찰 및 한국의 정책과제
김영택
- 2007 연구보고서-9. 여성 가족 패널 조사
박수미
- 2007 연구보고서-10. 비혼 1인가구의 가족의식 및 생활실태조사
김혜영
- 2007 연구보고서-11. 초등학교 ICT교육용 콘텐츠 내용분석 및 성인지성제고 방안
정경아

2007 연구보고서-12.	중년기 퇴직남성 부부의 갈등과 적응 변화순
2007 연구보고서-13-1.	여성인권보장 및 차별해소를 위한 관련법제정비 연구-헌법상의 여성관련 조항개정방안 박선영
2007 연구보고서-13-2.	여성인권보장 및 차별해소를 위한 관련법제정비 연구-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관련 법제 정비방안 박선영
2007 연구보고서-14.	기업내 여성경영참여 현황 및 향후과제 임희정
2007 연구보고서-15.	국가균형발전모델의 성 주류화 전략 개발(Ⅲ) - 성평등한 지역발전을 위한 사례분석과 가이드라인 개발 김양희
2007 연구보고서-16.	공직선거의 여성정책 공약 평가를 개발에 관한 연구 김원홍
2007 연구보고서-17.	한국형 다면성별의식검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안상수
2007 연구보고서-18.	2007 여성통계연보 -2007 도표로 보는 여성통계- 주재선
2007 연구보고서-19.	MDG 달성을 위한 ODA의 성 주류화 전략개발 곽숙희
2007 연구보고서(수시)-1.	2007 남북학술 · 전문용어비교사전 편찬사업참여를 위한 남북한여성전문용어 비교 연구 김원홍
2007 연구보고서(수시)-2.	군복무에 대한 사회통합적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군가산점제 부활 논쟁 을 계기로 박선영
2007 연구보고서(수시)-3.	2008부터 달라지는 가족법 · 가족관계 등록법 해설 박복순
2007 연구보고서(수시)-4.	차기정부 여성 · 가족정책 10대 과제 김경애
협동연구총서 07-19-01.	다민족 ·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Ⅰ)한국사회의 수용현실과 정책과제 김이선
협동연구총서 07-19-02.	한국사회의 다민족 · 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황정미
협동연구총서 07-19-03.	이주 노동자 대한 한국인의 인식 : 일터를 중심으로 오계택
협동연구총서 07-19-04.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 연구 양애경
협동연구총서 07-19-05.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생활실태와 교사 · 학생의 수용성 연구 조혜영
협동연구총서 07-19-06.	다민족 다문화사회 진전에 있어서의 사회갈등 양상과 극복과정 : 일본과 호주사례 이태주
협동연구총서 07-19-07.	이주자가 본 한국의 정책과 제도 한건수
협동연구총서 07-05-01.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구축방안 연구 홍승아
협동연구총서 07-05-02.	가족 친화적 기업모형 개발연구 김안나
협동연구총서 07-05-03.	가족 친화적 지역사회 모형개발 연구 홍승아